

# 인천광역시 청탁금지법 길잡이[ 1 ]

[주요내용 및 사례]

청렴韓  
세상인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 Contents

|                       |    |
|-----------------------|----|
| 1. 제정배경(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 3  |
| 2. 청탁금지법 한 눈에 알아보기    | 4  |
| ➢ 누가 누가 포함되나요?        | 4  |
| ➢ 부정청탁의 금지 및 처벌은?     | 5  |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처벌은?   | 7  |
|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 9  |
| ➢ 신고자 보호 · 보상 알아보기    | 10 |
| 3. 이런 사례 정도는 꼭 읽어보자!  | 11 |
| ➢ 부정청탁 사례             | 11 |
| ➢ 금품 수수 사례            | 18 |
| 4. 그렇다면 우리는?          | 25 |
| ➢ 우리의 대응자세            | 25 |
| ➢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 26 |

## [부록]

|                       |    |
|-----------------------|----|
| 1.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요약   | 30 |
| 2. 도표로 보는 청탁 금지법      | 31 |
| 3.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2단 비교표 | 33 |



## “ 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곧 부정의 시작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제재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가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 밖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 (OECD 34개국 중 27위)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확률이 15% 낮음 (뇌물척결보고서 OECD 사무국, `16. 5월)

안으로 국민신뢰를 높이고 밖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규범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정되는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누가 누가 포함되나요?

### ▲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죠?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 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가지)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2

## 부정청탁의 금지 및 처벌은?



### 무엇이 부정청탁이고 무엇은 아닌가요?

#### 이런 행위는 안되죠(14개)

- 불법 인 · 허가 · 면허 등 처리
  - 불법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 탈락되도록 개입
  - 각종 수상 · 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개입
  - 보조금 · 기금 등의 배정 ·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의 입학 · 성적 등에 개입 · 조작
  - 불법적인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개입
  - 행정지도 · 단속 등의 대상 배제 · 묵인
  - 수사 · 재판 · 심판 등에 개입
- ※ 위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 등의 지위 · 권한 남용

#### 이런 행위는 괜찮습니다(7개)

-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한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 시 처벌은 어떻게 되죠?

| 부정청탁 행위 유형    | 민 간 인             | 공직자 등                     |
|---------------|-------------------|---------------------------|
| 자신을 위하여 직접 청탁 | 제재 없음             | 징 계                       |
| 제3자를 통하여 청탁   | 1 천 만 원 이 하 과 태 료 |                           |
| 제3자를 위하여 청탁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 업무수행     | 해당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 벌금 |



### 3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처벌은?

“ **이런 금품등 수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 수수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이런 금품 등(8가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군요!**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법 제8조 제3항)

-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각종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 홍보용품 등,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의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 금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이하 징역</li> <li>3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 수수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수금액의 2배 이상 - 5배 이하 과태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0만원 이하 과태료</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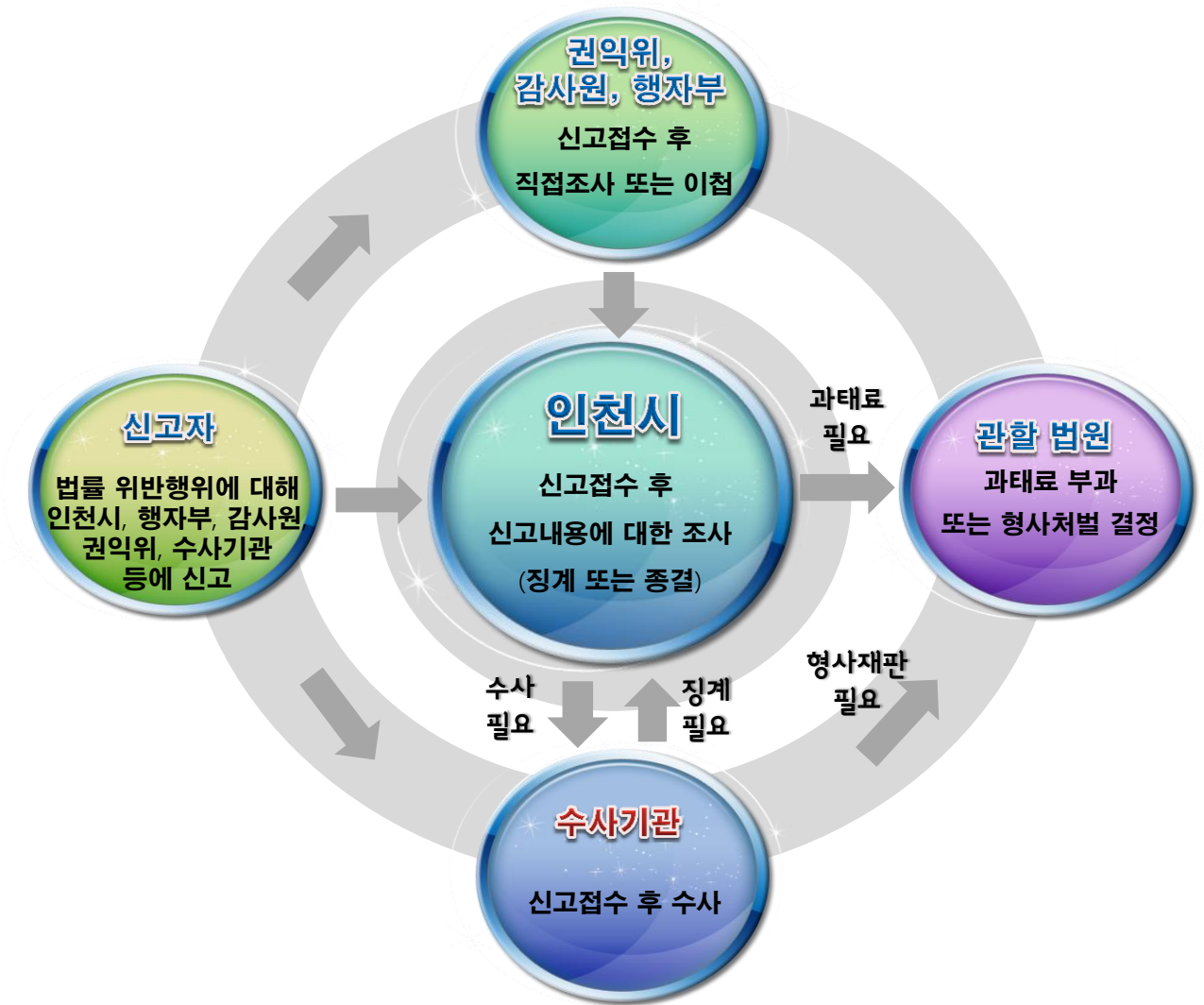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나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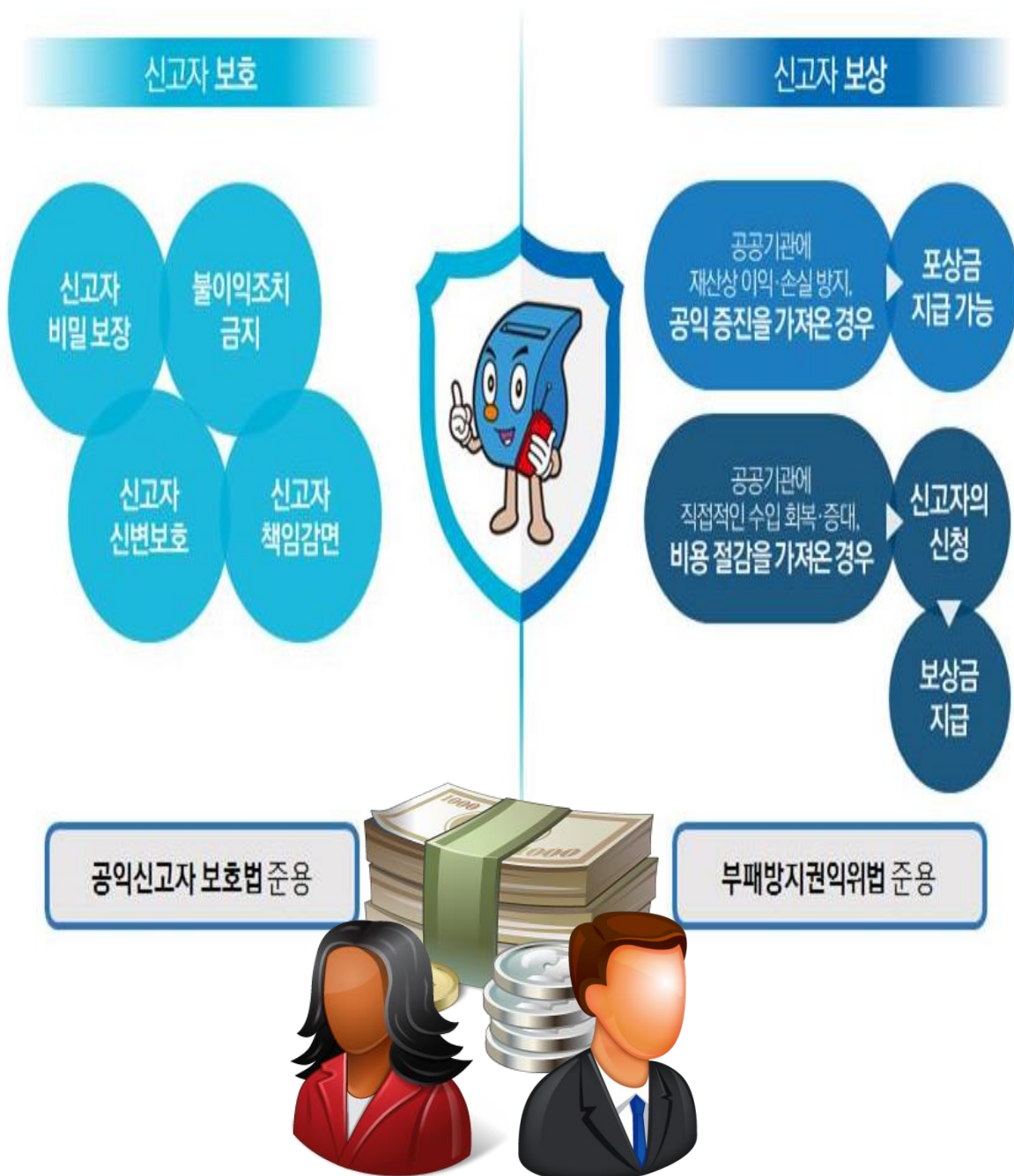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 등을 적은 문서에 서명하고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마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5

## 신고자 보호 · 보상 알아보기



## 1 부정청탁 사례

유형

민간인이 직접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 담당공무원 C를  
찾아가 허가를 내줄 것을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직접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제재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제3자(일반인)를 통하여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해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친구인 회사원 B(제3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렇다면 왜 제3자의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더 무거울까요?

- 우리사회는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탁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를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죠.

유형

제3자(공직자 등)를 통하여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시청 문화재과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하여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친구인 시청 문화재과 공무원 B(제3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 등이 민간인보다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더 무거운 이유는 다들 아시죠?**

- 공직자 등은 민간인보다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게 되니 공직자 분들은 명심하세요!

유형

동일한 부정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줄 것을 청탁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을 열심히 숙지한 C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시청 지방세과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해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청 지방세과 공무원 D(제3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공무원 C는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에게 신고했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물론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유와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그리고 ‘동일한 부정청탁’ 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인이 청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유형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궁금증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을 받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일단 아들 A는 청탁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대상은 아닙니다.(만약 아들 A가 청탁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민간인인 B의 경우 제3자인 아들을 위해 청탁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인 병무청 간부 D의 경우 제3자인 A를 위해 청탁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C는 A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형

처분감경을 위한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 고위 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시립의료원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중앙부처 의료분야 담당과장 C에게 감경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A 몰래 청탁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의 경우 부정청탁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위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과장 C의 경우 처분을 감경해 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인사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의 경우 부정청탁 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소속 국장 B는 제3자인 A를 위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과장 C의 경우 점수를 높게 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

궁금증

○○시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공무원 A는 제3자인 시장 B를 통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인 시장 B의 경우 제3자인 A를 위하여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평정권자 C는 B의 지시에 따라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궁금증

섬유관련 개인사업자인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는 ○○연구소 B연구사를 통해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과장 C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담당과장 C가 거절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개인사업자 A는 제3자인 연구사 B를 통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인인 연구사 B는 A를 위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부처 과장 C는 청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유형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궁금증

건설업자 A는 ○○시청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2천만원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업자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업자 A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계약법령에 따르면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분할 수의계약 청탁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건설업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 공무원 B는 A를 위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지막으로 계약담당공무원 C는 부정청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형

보조금 부정청탁

궁금증

어린이집 운영자 A는 광역자치단체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제3자인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의회 의원 B는 A를 위해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 담당자 C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의회 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인데 그렇다면 위 행위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아 처벌사유로 볼 수 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형

취업 관련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에서 지난 연말 3급 일반직 공무원(대변인)으로 정년퇴직 한 A는 일 자리를 알아보던 중 □방송에 취업하고자 하였음.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친구 B를 통해 취업승인 없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자인 친구B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C국장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형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궁금증

민원인 A는 건물 증축을 위해 ○○구청 증축허가 업무담당 공무원 C에게 증축 허가 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아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시위를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민원인 A가 공무원 B에게 부탁한 사항은 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당한 확인절차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의 시위 역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유형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궁금증

택시 블랙박스 장착 관련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정부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 C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해답

국회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3자인 A의 고충민원 또는 제도 제안사항을 전달하였으므로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 2

## 금품수수 사례

유형

회계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증

○○시청에서 지방소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답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A와 세무사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1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증

○○도시공사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식사 등 대접은 1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의 식사와 술자리는 1회의 접대로 볼 수 있고, 평등하게 분할 하였을 때 1인당 120만원에 상당하기 때문에 A, B, C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 할 경우

궁금증

○○시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됨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금품등의 경우 출처가 동일하면 동일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건설  
회사 소속 임직원 B,C,D의 접대는 □□건설회사의 단일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 A는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셈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B,C,D 에겐 각자 제공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 □□건설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B,C,D 각자 제공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유형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시청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인가요?

해답

국장 A와 대학동창 B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볼 수 없고, 5월 접대와 7월 선물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회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두 번 모두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형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로, 연말 동창회 참석 후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비 60만원을 계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답

A, B,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고, 식사비를 평등하게 분할 했을 때, 2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형

공익적 사용, 100만원 초과 수수

궁금증

○○시청 건설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는 B와 직무 관련성이 없음)

해답

금품등의 수수는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격려금 역시 100만원을 초과해서 수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유형

직무관련성이 있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시청 위생과 공무원 A는 해당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9월 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위생과 공무원 A와 요식업자 B는 위생과 공무원 A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A 수수금액의 2~5배, 요식업자 B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유형

직무관련성이 있고, 5만원 미만 선물

궁금증

○○시 공직유관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추석 명절 전 공직유관단체 팀장 B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자택으로 과일선물 세트를 받았다. 공무원 A는 선물을 돌려보내려고 B팀장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B팀장은 평소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고 가격 또한 4만 9천원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처벌 되나요?

해답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됩니다.

**(수수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유형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제공

궁금증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해답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유형

친족이 제공하는 물품

궁금증

○○시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해답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고,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장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기때문에금지되는 금품등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형

추첨을 통해 받은 물품

궁금증

○○시청 공무원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 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청공무원 A가 받은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

기준초과 금품 제공

궁금증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동창회의 회원인 ○○시청 고위공무원 A의 자녀 결혼식에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해답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형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

궁금증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해답

대기업 직원 B와 사무관 A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닙니다.

### 사회상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복잡 ·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의 동기 ·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형

수수금액의 반환

궁금증

○○시청 직원A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친구로부터 축의금 20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액범위(1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해답

시청 직원 A는 받은 축의금 전액 20만원중 가액기준을 초과한 10만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유형

경조사의 범위

궁금증

○○시청 공무원 A는 자신의 자녀 돌잔치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업체 대표B로부터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경조사비 가액범위 내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나요?

해답

안됩니다.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비속)과 장례(본인과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형

경조사에서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 대접

궁금증

○○시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가액범위(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이 가능한가요?

해답

가능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인만 추가적인 선물이나 별도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형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궁금증

○○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회사 대표 B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 수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궁금증

○○시청 ○○과 식품위생 관련 팀장(5급) A는 음식점협회로부터 1시간 30분의 법정위생교육 의뢰를 받고 출강하였다. A팀장은 출강 전 출장 결재를 득하였으나, 외부강의 사전신고는 누락한 채 강의 종료 후 협회로부터 4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출강이 아닌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고, 추가 사례 기준인 1시간 초과 시 상한액의 1/2한도 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수령 가능한 금액은 30만원임에도 초과 수령하였기 때문에 A팀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부강의 시 시간당 직급별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 구분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
| 상한액 | 50     | 40  | 30    | 20    |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시간당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과장이 2시간 강의 한 경우, 45만원 (30+15)을 넘는 사례금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우리의 대응 자세

## 우리의 대응 자세

##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요구 하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말자.

☞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

## 금품등 수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 **더치 패이 하자!! 받지 말자 !!**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를 제안 받았다면?

#### ● 상황

"팀장님! 2시가 넘었네요, 점심식사 저희랑 함께 하시고 그 이후 금번공사 설계용역 과업관련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 행동요령

- ▶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6.9.28부터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어 양쪽 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자 더치페이로 비용처리 함이 깔끔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 동의하셨으면 식사하러 가시죠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제3자가 미리 계산했을 경우?

#### ● 상황

"친구야! 오늘 저녁 먹은 거 계산했으니까 넌 그냥 가면 돼. 신경 쓸 필요 없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니?"

#### ● 행동요령

- ▶ 사장님, 저희 먹은 거 총 얼마예요? 9만원이면 제가 먹은 거는 3만원이네요.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 영수증 취소해 주시고 제가 먹은 거 3만원 별도로 발행해 주세요. 친구야, 예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이젠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되는 안되고 그 기준 적용이 애매해서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



## 부정한 인사청탁(재차 동일한 청탁)을 받은 경우 ?

### ● 상황

"팀장님! 금번 공무원시험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거 맞으시죠? 제 친구가 필기 시험 합격했는데요, 면접시험만 남아서요, 이번 응시가 세 번째라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 행동요령

- ▶ 후배님! 공무원 행동강령 모르나, 그리고 잘 알겠지만, 금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 또한 처벌대상이야! 친구한테 면접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 주는 게 나을 듯 싶어: (1회 거절)

### ● 상황

"팀장님! 이번만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면접만 잘 통과되면 아들 노릇도 하고 앞으로 병원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 ● 행동요령

- ▶ 여보게, 그 친구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걸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네  
(이것 참, ..재차 동일한 부탁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신고 해야 겠구만, 일단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신고서를 작성해야지):

2회 신고의무 발생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알 경우)

### ● 상 황

"선배님! 금번 인사 승진 축하 겸 해서 약소하지만, 골프 운동화 한 켤레 택배로 보냈고요. 앞으로 여유 되시면 저도 좀 챙겨주세요.

### ● 행동요령

- ▶ A: 이보게 승진 축하 해 주어서 고맙긴 한데, 자넨 뉴스도 안보나! 앞으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니까 우리 서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자고, 자네 집으로 반송할 터이니 그리 알고 어쨌든 마음만 받을 게 고마우이~

(잠시 후)

A: 아, 그런데 그냥 반송해도 될까?

불안하니까 청탁금지법신고센터(032-440-3182) 인천시청 감사관실로 문의해봐야 겠군.

(전화)

B: 네, 감사관실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한테 선물을 택배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런 경우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저희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 그렇군요,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모름 경우)

### ● 상 황

"여보! 당신한테 추석선물로 사과 선물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안 적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 ● 행동요령

- ▶ A: 받으면 안되지! 이를 어찌지...아, 저번에 한과장도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이용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신고센터(032-440-3182)로 전화해봐야 겠군.

(전화)

B: 네, 감사관실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선물을 택배로 받았는데 발송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런 경우는 저희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 그렇군요,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동강령 절차에 따라 공고 후 세입조치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선정 제공(즉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축의금 받은 경우

### ● 상 황

"과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데 가족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좀 여유 있게 축의금을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 ● 행동요령

- ▶ 이 사람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경조사의 경우 10만원이 상한액이고 더구나 자네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어도 직무관련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돌려줄 터이니 그리 알게.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승진 축하 화환 등을 받은 경우

### ● 상 황

"국장님! 승진 축하 겸 해서 화환이랑 축하 떡 좀 보냈고요, 한가해 지시면 저녁이나 한끼 하시죠"

### ● 행동요령

- ▶ '16. 9. 28부터는 직무관련 연관성,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받을 수 없네. 좀 있으면 퇴직하니까 그 이후 거하게 소주 한잔 하자고, 내가 한잔 사겠네 (청탁금지법신고센터로 신고 후 반환 조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콘도 회원권은 받아도 될까?

### ● 상 황

"감독관님! 금번 하계 휴가 시 숙박장소 마땅치 않으시면 저희 법인콘도 회원권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 행동요령

- ▶ 말씀 감사한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연관성 적용가능성이 있어 서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니까 나중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 게요.

### ▼ 목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국민신뢰 확보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행위유형 - 14개(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 금지 예외유형 - 7개(법 제5조 제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적용대상 - (법 제8조 제1항, 제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유형 - (법 제8조 제3항)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법 제10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영 제25조)

### ▼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법 제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법 제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법 제13조)
- 신고의 처리 - (법 제14조)

#### <시행령 법조항>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영 제24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방법(영 제26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영 제27조)
- 반환 · 인도 비용의 청구(영 제28조)
-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영 제30조)

### ▼ 보호 · 보상 등

- 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법 제15조)

###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징계 및 벌칙(법 제21, 제22조)
-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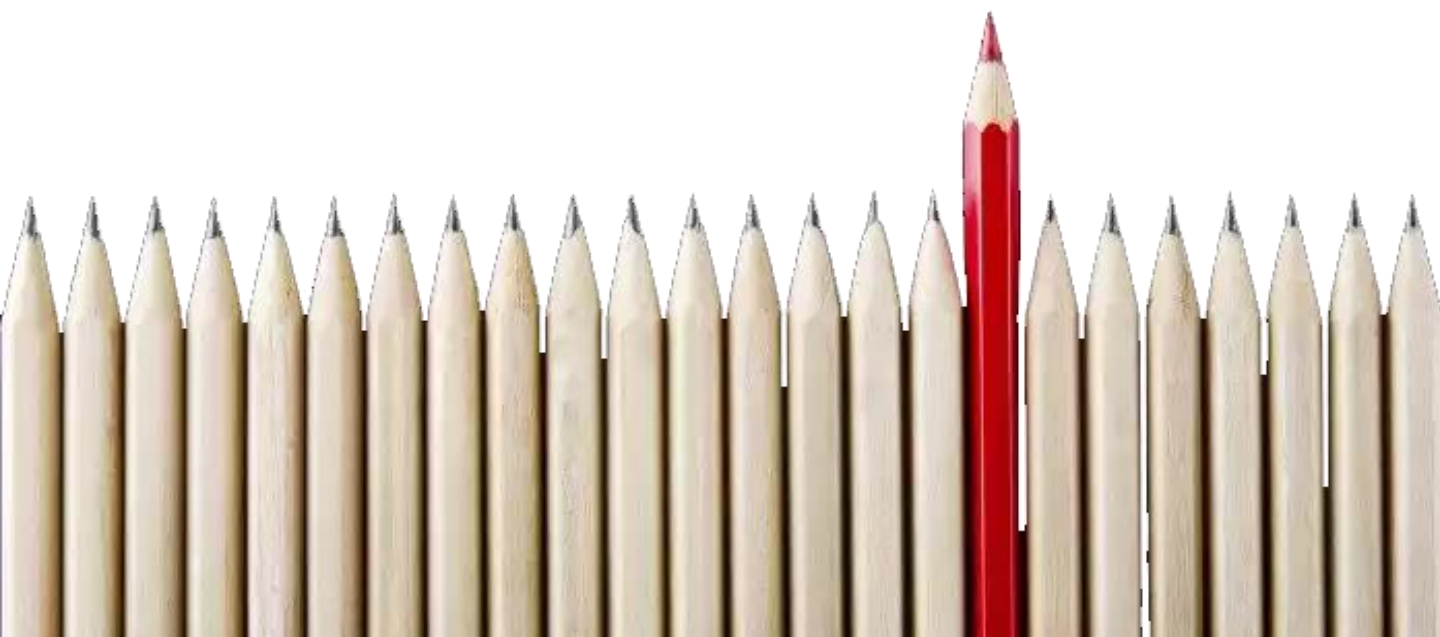


### ▼ 분야별 처벌기준(원칙)

| 구분    | 행위주체  | 유형                  | 제재 수준                          |
|-------|-------|---------------------|--------------------------------|
| 부정 청탁 | 이해당사자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 No 제재 없음                       |
|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 Yes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 제3자   | 사인 (私人)             | Yes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       |       | 공직자 등               | Yes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       | 공직자 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 Yes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구분   | 대상자            | 직무관련 유무 | 대가성 유무 | 금품등 수수한도 (동일인 기준)          | 제재 대상 | 처벌기준                       |
|------|----------------|---------|--------|----------------------------|-------|----------------------------|
| 금품 등 | 공직자 등 (배우자 포함) | Yes     | Yes    | 금액불문                       | Yes   | 뇌물죄                        |
|      |                | Yes     | No     | 1백만원 이하                    | Yes   |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5배)          |
|      |                |         |        |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 Yes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                | No      | No     |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 Yes   |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구분  | 대상자               | 직무관련<br>유무 | 대가성<br>유무 | 금품등 수수한도<br>(동일인 기준)          | 제재<br>대상 | 처벌기준                          |
|-----|-------------------|------------|-----------|-------------------------------|----------|-------------------------------|
| 경조사 | 공직자 등<br>(배우자 포함) | Yes        | Yes       | 10만원 이하                       | Yes      | 뇌물죄<br>(과태료)                  |
|     |                   | Yes        | No        | 10만원 이하<br>(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함)     | No       | 제재없음                          |
|     |                   |            |           | 10만원 초과<br>1백만원 이하            | Yes      | 과태료<br>(수수금액의 2배~5배)          |
|     |                   | No         | No        | 1회 1백만원 초과,<br>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 Yes      | 형사처벌<br>(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b>청탁금지법</b><br><b>[시행 2016.9.28./제정 2015.3.27.]</b>   | <b>청탁금지법 시행령</b><br><b>[시행 2016.9.28./ 제정 2016.9.8.]</b>  |
|--|---|
|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b>제2조(정의)</b>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p> | <p><b>제2조(윤리강령)</b>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



| <b>청탁금지법</b><br><b>[시행 2016.9.28./제정 2015.3.27.]</b>   | <b>청탁금지법 시행령</b><br><b>[시행 2016.9.28./ 제정 2016.9.8.]</b> |
|--|--|
| <p>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p> <p>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p> |  |
|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p><b>4조(공직자등의 의무)</b>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  |
| <p><b>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b></p> <p>제5조(부정청탁의 금지)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p>                    | <p><b>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b></p>                             |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

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②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들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들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들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소속기관장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3.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b>청탁금지법</b><br><b>[시행 2016.9.28./제정 2015.3.27.]</b>   | <b>청탁금지법 시행령</b><br><b>[시행 2016.9.28./ 제정 2016.9.8.]</b>  |
|--|---|
| <p><b>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b>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p><b>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b>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p>  |   |
| <p><b>제18조(비밀누설 금지)</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li> <li>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li> </ol>                                 |   |
| <p><b>제19조(교육과 홍보 등)</b>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 <p><b>제42조(교육 등)</b>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
| <p><b>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b>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li> <li>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li> <li>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li> </ol>      |   |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 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 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 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 (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b>청탁금지법</b><br><b>[시행 2016.9.28./제정 2015.3.27.]</b>  | <b>청탁금지법 시행령</b><br><b>[시행 2016.9.28./ 제정 2016.9.8.]</b>   |
|---|--|
|   | <p>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li> <li>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li> </ol> <p>제45조(규제의 재검토)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li> <li>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li> </ol> |
| <p><b>부칙&lt;법률 제13278호, 2015.3.27.&gt;</b><br/> <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b>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br/> <b>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b>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p> | <p><b>부 칙 &lt;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gt;</b><br/>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구 분  | 가액<br>범위 |
|--|----------|
|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 구분  | 장관급<br>이상 | 차관급  | 4급<br>이상 | 5급<br>이하 |
|-----|-----------|------|----------|----------|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br>직원 |
|-----|------|------|-----------|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  
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  
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  
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  
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  
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제정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제정 2016.9.8.]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